

# 바이든·트럼프



11월 미국 대선 조기 점화

바이든, 사모아 제외 경선 완승  
트럼프, 버몬트 외 14개주 압도

바이든 “트럼프 재집권시 ‘복수’”  
트럼프 “11월 5일 나라 되찾을 것”

트럼프 여론조사 앞서나 판세 유동적  
바이든 고령·트럼프 사법리스크 변수

민주당 조 바이든(사신 왼쪽)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대통령의 오는 11월 미국 대선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등 15개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동시에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사모아를 제외하고 모조리 승리했다.

사모아 코커스(당원대회)에서는 메릴랜드 볼티모어 출신 사업가 제이슨 팔머가 깜짝 승리를 거뒀지만,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공화당 경선을 치른 15개 주 가운데 버몬트를 제외한 14개주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 승리했거나,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헤일리 전 대사는 버몬트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89.8% 개표 기준 50.0% 득표율을 기록, 트럼프 전 대통령(45.7%)을 제쳤다. 버몬트주에 할당된 대의원은 모두 17명이다.

헤일리 전 대사는 앞서 지난 3일 워싱턴 DC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첫 승을 거둔 바 있다.

헤일리 전 대사의 예상 밖 승리에도 버지니아와 메인 등 중도층이 두터운 주에서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을 휩쓸며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 됐다.

공화당의 경우 이날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결정되는 대의원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893명의 대의원을, 헤일리 전 대사는 66명의 대의원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CNN은 예상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두 1천215명의 대의원을 손에 넣어야 한다.

또 CNN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우 이날 경선까지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이 1291명 대의원 가운데 1289명을 차지해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독식하는 구조였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1천968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화요일을 휩쓸며 대규모 대의원단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이번 선거 첫 중대 관문인 ‘슈퍼 화요일’을 손쉽게 넘어서며, 미국 대선은 사실상 일찌감치 본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아직 상당수 주(州)에서 경선 일정 남아 있는 하지만 현역인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추진 절차에 불과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뒤인 7일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2기’의 정책 비전을 공개하고 11월까지 약 8

# 사실상 리턴매치

개월간 본선 레이스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유일한 경쟁자인 헤일리 전 대사를 크게 앞서고 있어 이달 중 확실하게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4년전 나는 트럼프가 미국에 취했던 실존적 위협 때문에 출마에 나섰다”며 “(트럼프는) 미국 국민이 아닌 자신의 복수와 보복에 초점을 맞춘 불만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트럼프 재집권 상황을 노골적으로 경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승리가 우리의 궁극적 복수”라며 노골적으로 복수를 다짐한 데 이어, 마라라고 자택에서 별도 연설을 통해 “11월 5일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다.

현재 여론조사 흐름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앞선 상황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이날까지 전국 단위 여론조사 591개를 평균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 대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균 45.6%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3.5%)을 2.1%포인트 앞섰다.

다만 11월까지의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데다 오차 범위 안의 격차인 만큼 아직 우위를 예측하

기는 선부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질적인 지지율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이스라엘 전쟁 이후 등을 돌리고 있는 중동계를 포함한 유색인종 및 진보, 젊은층의 지지를 되돌리는 것이 최대 숙제다.

올해 81세로 현직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 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를 조기에 불식하는 것 역시 관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대권 가도에 최대 복병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비롯해 모두 4가지 사안(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

그가 유죄 확정될 경우 현재 지지를 보내고 있는 유권자의 상당수는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법부의 손에 미국 대선이 좌지우지되는 조류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슈퍼화요일로 일단락은 지어졌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6월까지 남은 경선 일정을 이어가게 된다. 공화당은 오는 7월 15-18일 밀워키에서 전당 대회를 열어 부통령과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고, 민주당은 오는 8월 19-22일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정·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연합뉴스

## “15세 고교 졸업·18세 결혼 가능” 중국 양회 저출생대책 제안 봇물

출산 유급휴가 2년 연장·직장 유치원 설립도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맞아 양회 대표들로부터 저출생 대책을 비롯해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제안과 아이디어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6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우선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기본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는 아이디어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안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위원인 정년장업 뎬도인 홍밍지(洪明基)가 한 것이다.

홍 위원은 교육개혁을 위해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19세에 불과해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홍 위원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의 직업 선택과 결혼, 출산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도 잇따랐다.

역시 정협 위원인 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롄(韓華田) 교수는 중국의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하면서 저출생이란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다.

간 교수는 그러면서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밍지 위원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직장 내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년 취업난 속에 학력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중국 공정원 원사인 판푸생(潘復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이력서와 상급학교 지원서에 최초 출신학교(학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는 고교 졸업 후 어는 대학에 진학했는지와 취업과 대학원 진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판 대표의 논리다. /연합뉴스

## 강제노동 확인된 제품 유럽서 ‘퇴출’

EU 이사회 등 협상 잠정타결...승인 3년 후부터  
중국 신장·브라질·인도네시아 등 집중 타깃 될 듯

유럽연합(EU)이 생산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이 확인된 모든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강제노동 관련 제품 금지’ 규정에 대한 3차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향후 이사회, 의회에서 각각 승인하면 발효된다. 본격 시행 시기는 3년 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새 규정은 강제노동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주로 농축산물 및 식품 산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강제노동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된 중국 신장을 비롯해 EU의 주요

농축산물 수입국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규정에 따르면 각 회원국 관할 당국 혹은 집행위 차원에서 조사를 거쳐 생산 공정에 강제노동이 확인되면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수입 통관 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된 물량은 폐기 처분될 수 있다.

회원국 중 한 곳에서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나머지 전체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의 피에르 이버스 데르마흐너 경제고용부 장관은 “21세기에도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 끔찍하다”면서 “새 규정을 통해 그런 제품이 EU 단일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으로 러 군함 격침...러군 7명 사망”

흑해함대 소속 초계정 1척 침몰...지난달 상륙함 격침 등 ‘해상 선전’

우크라이나군이 해상 드론(무인기)으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초계정 1척을 침몰시켰으며, 이 공격으로 러시아 군인 7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BBC,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총정보국(HUR)은 이날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제13군 특수부대가 해상 드론으로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서부 해안을 가르는 케르치 해협 인근 흑해에서 러시아 초계정 ‘세르

게이 코토프’를 격침했다고 발표했다.

HUR는 “마구라 V5” 해상 드론의 공격으로 세르게이 코토프가 선미, 우현, 좌현에 손상을 입었다”면서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고 뒤이어 침몰했다”고 설명했다. 군함 침몰 과정에서 러시아 군인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으며 52명은 대피했다고 HUR는 덧붙였다.

안드리 유소프 HUR 대변인은 ‘자유 유럽’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코토프가 이

전에도 표적 공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파괴됐다”고 전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 해군과 공군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입증했다”며 “흑해에는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없으며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러시아 초계정 침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크림린공은 아직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부 러시아 블로거들은 세르게이 코토프의 침몰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